

## # 2. 방사능 없는 지역, 핵 없는 한국사회

# 지역 에너지 전환·자립을 통한 탈핵 실현

### □ 일시 및 장소

- ◆ 일시: 2014년 3월 12일(수), 저녁 19시 00분
- ◆ 장소: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 □ 발제 및 토론

- ◆ 사회: 홍원표 정책위 실장
- ◆ 발제: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지역에너지 전환·자립의 방향과 정책
  - 김희서(노동당 구로당협 당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대표 발의자): 탈핵 운동의 대중적 확산 모색
- ◆ 토론
  - 이유진(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이호동(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 이현민(부안시민발전소 소장)

## 로컬에너지 전환자립의 방향과 정책

### – 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Local –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노동당이 탈핵 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탈핵희망버스라 하겠다.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실천은 의회 공간 이상으로 지역 공간, 현장 공간, 거리 공간, 일상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하고, 노동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략적으로 개입할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책 방향을 로컬에너지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한다. 키워드는 지역 그리고 노동이다.
-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탈핵 에너지 전환에 관한 좋은 정책은 제법 많고, 법안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후쿠시마 이후에 국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과라면 이 정도 아닐까 싶다. 물론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도 있지만. 오히려 지방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 작은 스케일에서는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니치 실험에도 관심을 뒤야 한다.
- 이 글의 제목은 로컬에너지 전환자립의 방향과 정책이긴 하지만, 토론회 주최 측의 특성을 반영해 탈핵 에너지 전환의 입장에 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정책과 노동당이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분해서 토론하고자 한다.<sup>1)</sup>
- 본론에서 다룰 두 주제의 배경이 되는 ‘진보정당 녹색공약의 약속’과 ‘핵발전 균열구조의 변화’를 차례로 살펴보고, ‘재생에너지동맹’과 ‘지역에너지공사’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 1. 진보정당 녹색공약의 약속

1) 이 글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연구소가 수행한 몇몇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 진보정당이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녹색을 어떻게 다루왔는지 공약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sup>2)</sup>
- 진보정당의 역대 대선에서의 녹색관련 선거 공약을 보면, 10대, 혹은 15대 핵심공약에 환경이 포함돼 있었다. 1997년 국민승리21은 10대 핵심공약에 “깨끗한 환경을 누릴 국민권리의 전면 보장”을 제시했고,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핵심정책 중 하나로 “반환경적, 반민중적 국가에너지 정책 제고”를 선정했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아토피 걱정없는 환경”, “토건국가 해체,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을 꼽았다.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은 “핵발전소 폐기, 에너지 전환”을,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한 지난 네 번의 대선에서 녹색공약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틀에서, 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 에너지전환, 아토피와 어린이 건강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핵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줄여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녹색사민당은 “환경세 및 오염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사회당은 “핵발전 정책 폐기-재생 에너지 도입”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대운하 저지”를 공약했고,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2030 핵발전소 폐쇄, 에너지전환”을, **진보신당은 “탈핵 2030!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공약했다.** 역대 총선의 녹색분야 핵심공약은 에너지 분야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은 학교급식과 토건개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확대와 “무절제한 개발사업 억제”를, 2006년에는 “자동차와 건설 행위 규제”를 통해 “대기오염에 의한 주민건강권”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업 지원”을 공약했고, 진보신당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약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4대강 등 토건반대를 중점적으로 공약했다.**
- 전반적으로 역대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대선에서는 에너지와 토건 전환을, 총선에서는 탈핵을, 지방선거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했다(이상 [표 1] 참조). 당시 진보정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정치 의제였거나 사회적으로 부상했던 의제를 공약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는 에너지 의제가 과거에 비해(여전히 다른 의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지만)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

2) 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민주의 녹색화 방향과 전략 연구-독일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정의연구소, 2013을 참조.

- 2014년 지방선거의 녹색/에너지공약으로 노동당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가? 예컨대, “탈핵사회를 위한 주민참여형 소규모 친환경발전소 건설”은 어떤가?

[표 1] 진보정당의 역대 선거 주요 녹색공약

	연도	당명	녹색공약
대선	1997	국민승리21	[10대 핵심공약] 깨끗한 환경을 누릴 국민권리의 전면보장
	2002	민주노동당	[21대 기본정책] 생태와 함께 하는 지속사회 [15대 핵심정책] 10. 반환경적, 반민중적 국가에너지 정책 제고
		사회당	○ 자본의 전 지구화 ‘신자유주의’ 반대 - 반환경적, 반민중적 국가에너지 정책 제고
	2007	민주노동당	[경제민생] 3.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육환경] 3.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4.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여 친환경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12	통합진보당	[공약10] 핵발전소 폐기, 에너지 전환
		진보정의당	[20대공약] 11. 2040년 핵발전 제로 달성과 에너지 정의 실현, 12. 동물보호법 제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국가 실현, 13. 식량자급률 50% 달성,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건강체제 구축
		무소속	[공약6]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총선	2000	민주노동당	[24대공약] 핵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2004	민주노동당	[10대 공약] ⑩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녹색사민당	[15대 주요공약] 환경세 및 오염배출권 거래제 도입
		사회당	[10대 공약] ⑩ 핵발전 정책 폐기·재생 에너지 도입
	2008	민주노동당	[교육·환경] 대운하를 저지하여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2012	통합진보당	[정책10] 2030 핵발전소 폐쇄, 에너지 전환
진보신당	[정책1] 탈핵 2030!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방선거	2002	민주노동당	[25대 공약] <11. 교육 급식> 학교급식 재정과 학교복지사 고용을 지원하여, 서민의 급식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개발 환경> 무절제한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지방환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쾌적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006	민주노동당	[교육환경] 대도시의 자동차와 건설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에 의한 주민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2010	민주노동당	10대 공약 없음(세부항목에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농업 지원” 간략 언급)
진보신당		[공약3]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공약9]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강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겠습니다.	

## 2. 핵발전 균열구조의 변화 흐름

-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핵발전소 사건비리를 계기로 핵발전의 균열구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sup>3)</sup> 탈핵운동의 전국적인 연대, 지식사회의 각성, 녹색당의 창당과 민주당의 탈핵강령 채택 등 탈핵의 저변이 확장되면서 전반적으로 탈핵-찬핵의 균열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탈핵동맹의 강도와 영향력, 동시에 동맹의 응집력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찬핵동맹이 힘의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탈핵동맹 내의 정치사회, 시민사회, 언론지식사회에 비해 경제사회에서의 탈핵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에너지 전환을 지지할 정도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대안 에너지에 대한 노동친화적 접근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 ‘후쿠시마 효과’가 끝나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핵발전 카르텔이 쉽게 무너질 정도로 취약하지 않다. 한국은 탈핵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단힌 사회’이지만,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정책변동의 흐름에 조응하는 정치사회적 전략을 세워 구체 상황과 상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경로전환의 성패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찬핵동맹 약화’와 ‘탈핵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데 유용한 전략적 선택지는 무엇인가. 탈핵동맹이 몇몇 수단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적 전략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탈핵 에너지 전환 전략

	제도적 전략					사회운동적 전략		
	로비/ 청원/ 행정 개입	입법/ 제도 개선	탈핵 선거	국민/ 주민 투표	법적 소송	대중운동 /지역운동	에너지 전환실험 /대안 시나리오	적록동맹 /재생에너 지동맹
효과	낮음	높음	높음	낮음	중간	높음(기본)	높음(기본)	높음
활용	낮음	중간	중간	낮음	중간	중간	낮음	낮음

- 한국에서는 아직도 탈핵이 정치적 의제설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로 전환을 위해 다층적 다면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각 전략마다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도적 전략에서는 입법/제도 개선, 탈핵 선거가 효과가 높고, 국민/주민투표와 법적 소송은 중간이거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운동적 전략으로는 대중운동/지역운동과 에너지 전환 실험/대안 시나리오 공론화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탈핵동맹에서 기본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경제사

3) 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탈핵 에너지 전환 정치·사회 시나리오 연구」,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2012를 참조.

회에서의 동맹구조가 형성되어야, 독일에서처럼 계급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에 대해서 탈핵동맹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거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탈핵 균열구조의 변화 흐름과 탈핵 에너지 전환 전략의 선택지에서 노동당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예컨대, '2030 탈핵 로드맵'은 어떤가?

### 3. 지방선거 에너지 정책·공약 토론 주제

- 우선 이상의 논의를 ① 탈핵 에너지 전환 운동의 흐름과 ② 지방선거에서의 노동당의 위상과 지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정리해보자.
- 핵발전 수명·안전·사고·비리 문제들이 점차 탈핵 에너지 전환 프레임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프레임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 카르텔의 '원전 확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핵발전 입지 (예정) 지역과 송전탑 (예정) 지역에서는 '에너지 반란'이 벌어지고 있고, 지역적 에너지 전환 실험('에너지 노예'에서 '에너지 시민'으로)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는 (억압과 배제와 병행하는) 보상/지원으로 정상화되는 계기와 시스템이 전환되는 탈정상화되는 계기가 나타나고 있다—물론 보상/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은 탈핵 에너지 전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 다음으로 노동당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방향을 향하려 하는가. 녹색에 최적화된 정책을 생산할 녹색당과는 어떤 정책적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현실에서 녹색의제에 대한 반응이 직접적인 것은 지역정치, 일상정치 일선이다.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사회적으로 일정한 반향을 일으키고, 당 조직적으로도 성공한 녹색의제는 학교급식운동과 아토피캠페인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급식운동은 지역당(당원)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조례제정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생활정치 영역에서 유권자들의 직접적 관심 사안을 다뤘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아토피캠페인의 경우 제도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권자 다중(특히, 아이 엄마)의 현실적 문제를 듣고 정치적으로 대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노동당은—지방선거와 상관없이도—지역의제이자 생활의제에 착목해야 하고, 그렇게 의제화해야 한다. 그러나 탈핵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할 자원과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당을 둘러싼 녹색당, 정의당, 민주당을 한번 보자. 민주당을 제외하고, 이들 정당과 노동당의 차이란 거의 없다.
- 노동당의 역량과 포지션을 감안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리고 이후에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은 많지 않다. 탈핵 에너지 전환 진영에서 누구나 이야기하는 법·제도 개선과 대

동소이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30 탈핵 로드맵’과 같은 미래 비전은 유지하되 틈새 전략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 1)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동맹 형성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떠올리지 말자. 개혁/진보/녹색 정당이 녹색경제와 녹색 일자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실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어쩌면 탈핵 네트워크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경제 사회, 즉 노동사회가 꼽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줄이자는 목표도 좋고, 탈핵을 몇 년에 이루겠다는 목표도 좋지만,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은 녹색-좌파의 것이 아니라, 보수-시장의 것이다. 그렇지만 어디에 풍력 산업 노동자들이 있고, 태양광 산업 노동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재생에너지만 떠드는 것은 녹색-좌파의 몫이 아니다.<sup>4)</sup>
- 원자력공급 산업체에서 원전관련 매출 비중은 4.9%, 원자력산업 인력은 23,835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핵발전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낮은 수준이다. 한편 1990년대 이후 핵산업계의 연간 매출규모는 연간 2조 원대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급상승해 2010년 현재 4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매출의 대부분(79.2%)이 원전건설과 운영 분야에서 발생했고, 이 중 제조업(38.6%)과 건설업(20.1%) 비중이 매우 높았다. 즉, 원자력 관련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제조업 분야의 두산중공업과 한진원자력연료, 건설업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이해관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과 인력 규모는 핵발전보다는 작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핵산업과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부회장단에 두산중공업 대표가 포함돼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 계열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핵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탈핵을 하는 데 중요한 쟁점을 형성할 수 있다. 유럽의 조선산업이 풍력산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듯이 핵 산업 축소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의 산업전환이라는 긍정적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역

4) 이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탈핵 에너지 전환 정치·사회 시나리오 연구」,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2012를 참조.

으로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잠김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을 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재생에너지산업법을 제정해 관련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당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현 시점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에 있어 더 시급한 것은, 재생에너지동맹을 조직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그 자체로 당위적일뿐 아니라 탈핵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처럼 재생에너지 기업과 노동자들은 탈핵을 지지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기 마련이고 ‘찬핵의 반동’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조직적 동력이 된다. 아직까지 경제사회에서의 탈핵동맹이 취약하고, 탈핵동맹 내에서도 ‘적녹동맹’ 혹은 ‘재생에너지동맹’을 탈핵전략으로 구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또한 핵산업의 축소와 고용의 변화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미칠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화가 재벌 중심, 수출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그런 징후가 포착된다. 따라서 탈핵동맹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제작하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에너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사회적 경제단위를 실험해야 한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동맹이야말로 탈핵동맹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고, 에너지 기본권이 실현되고 녹색사회로 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2) 에너지 지역화와 공유화를 위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운영

-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 담론은 서로 다른 두 맥락에서 구성되었다. 2000년대 초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에서 전력산업의 사유화에 저항하는 에너지 공공성 담론을 낳았다. 당시 쟁점은 주로 경쟁(시장)-규제(국가)라는 대립축에 기댔다. 그러다 보니 공공성 진영은 에너지 전환에서의 ‘지역화’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중앙 집중형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기에 급급했다.<sup>5)</sup>
- 환경 진영은 지역화에 바탕을 둔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핵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삼아 국가와 자본이 관장하는 공급중심의 경성에너지체제를 비판하면서, 지역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과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연성에너지체제

5) 주로 이정필, “탈핵 에너지 전환의 지역화와 사회화 그 대안을 모색한다,” 노동당, 「매레에서 온 편지」, 2014. 1. 제5호를 참조.

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 진영의 에너지 전환 담론은 사회구성체의 ‘체제 전환’에 관심을 두지 않아 에너지 전환의 ‘공유화’ 혹은 ‘사회화’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논란 속에서 환경 진영 일부는 ‘민영화’를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다른 한편 지역에너지 연구와 실천은 국가-광역-기초-마을 단위로 형성되는 ‘다중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을 강조하다보니 마을 단위를 주된 실천 공간으로 설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 이렇게 국내의 에너지 전환 담론은 국가와 자본의 에너지체제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전통적 좌파 진영은 공공성 실현 논리 하에 사유화 반대에 집중했고, 반면 환경 진영은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논리 하에 중앙 집중형 에너지체제 반대에 집중했다. 그러나 ‘에너지 정의’, ‘에너지 주권’, ‘에너지 분권’, ‘에너지 혁신’이라는 개념이 회자되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지역화’와 ‘공유화’를 통합하는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노동당의 탈핵 에너지 전환 프레임은 국내 논쟁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되, 지역화와 공유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기보다는 국내외에서 불고 있는 ‘에너지 반란’에 주목하면 중요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 1980년 전후로 지배적 위치를 점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 분야의 사유화와 자유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익숙했던 에너지 공기업의 형태는 자취를 감췄다. 에너지 사유화와 자유화로 인해 생태적인 전력 공급자 일부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불공정한 조건하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불리한 경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사유화와 자유화가 심화될수록 그 폐해는 커져갔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 점차 에너지협동조합(혹은 공동체에너지)과 지역에너지공사 같은 모델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 한국의 경우 전력시스템의 역사적 경로와 맥락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러한 해외 담론과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에너지의 지역화와 공유화 담론과 경험을 재해석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화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더라도, 더 넓은 함의를 갖는 공유적-공영적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시스템, 특히 전력시스템의 공기업 형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환의 논리’로 적합한 제도적 형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 연성에너지체제의 제도적 형태는 행위 주체에 따라 공적, 사적, 시민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공간적 범주에 따라 국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마을로 구분된다.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 시민기업 방식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지역에너지공사를 노동당이 주목해야 할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형태로 상정한다. 물론 노동당 일부 정치인과 당원들이 에너지 협동조합과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에 앞장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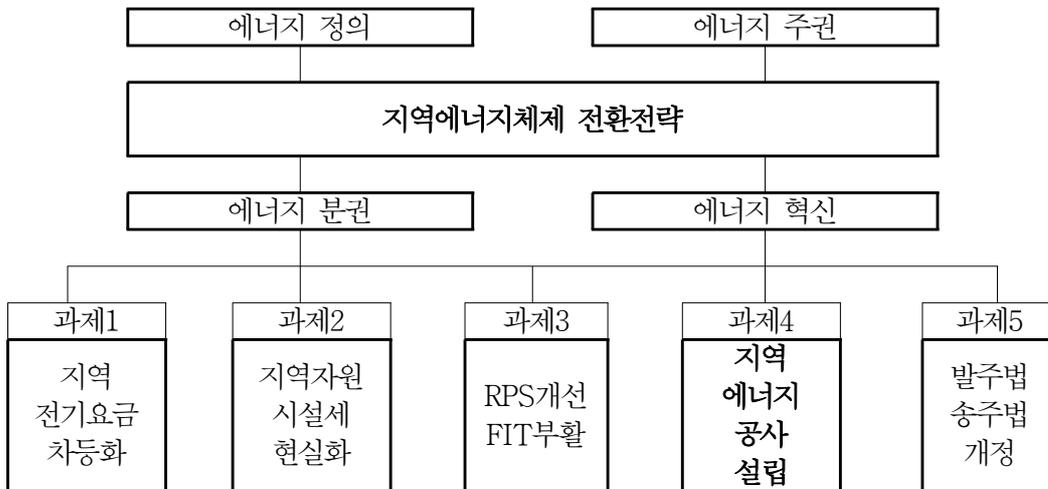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은평구의 ‘우리동네 녹색대안 만들기’ 실험에도 주목해야 한다. 노동당과 녹색당 당원이 함께하는 이 모임은 에너지/토건교통/주거/문화/먹거리 5개의 모둠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공개 청구해서 직접 지역공약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장차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도 있을 텐데, 노동당의 녹색대안이라면, 에너지대안이라면 이런 과정, 나아가 민중의회(혹은 시민의회)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 그러나 이 글에서 지역에너지공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가-광역-기초-마을이라는 다층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가와 마을 단위를 잇는 중범위에서의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역에너지공사는 아직은 마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 실험의 부족한 틈새를 채우면서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지역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진단컨설팅, 건물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교육홍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특히 기왕의 지역개발공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 주 정전사태에서 새크라멘토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도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던 시영전력회사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적이었던 점을 상기하자.
- 2012년 7월 1일에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너지공사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전담기구로 발족됐으며, 특히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바람의 에너지 ‘자원화’와 ‘공공화’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논리가 된다. 그러나 지역에너지공사를 가로 막는 법·제도적 장벽이 많다.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의 법적 제약에서부터 한전 독점 구조를 비롯한 전력 시스템,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와 에너지교통환경세 등 제도적 제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운영할 재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서울과 충남 지자체에서 이런 지역에너지공사 모델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지는데, 그 형태와 범위 등 모든 내용은 논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 에너지 협동조합과 함께 지역에너지공사는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전략적 모델이자, 지역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방 차치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동당 색깔에 맞는 지역에너지공사의 모델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독일의 재지역화 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그리고 국내 몇몇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지역에너지공사 모델에 대해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추가 논의

- 탈핵과 노동시간 단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소위 ‘탈핵 노동시간 단축법 3종 세트’(제조업 심야노동 제한법, 사무직 칼퇴근법, 서비스 유통업 휴무 의무화와 운영시간 제한법)도 제안된 적이 있다.<sup>6)</sup>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을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을 선호하는 정당이라면,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검토와 정책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앞서 제안한 노동당의 지방선거 정책 방향과 과제(재생에너지동맹과 지역에너지공사) 논의가 일반적인 선거공약 설계와 이질적인 성격이 있고, 구체 정책으로 작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그림 1]과 같은 로컬에너지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예시로 소개한다.<sup>7)</sup>  
<끝>

[그림 1] 로컬에너지시스템의 전환전략 구상



6) 김현우, “탈핵 노동시간 단축법 3중세트 만들자,” 레디앙, 2012. 10. 16.

7) 이상헌·이정필·이보아, 「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 충남발전연구원(보고서 발간 예정).